

‘노하우 탈취’ 의혹 대한전선, LS 지분 확보 ‘경영개입’ 논란

가운건축사무소, LS 공장설계 이어 대한전선 당진공장 건설에도 참여 경찰, 대한전선 압수수색 결과 이목 LS전선 “전선 공장 6곳 외형 달라 우리공장과 대한전선 매우 비슷”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그룹에서 LS지분 매입 ‘전략적 움직임’ 해석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HVDC(초고압직류송전) 전용 공장(왼쪽)과 충남 당진시 위치한 대한전선 HVDC 공장 전경. /각사



/각사

국내 케이블업계 1위 LS전선과 2위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유출’ 의혹을 두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LS전선은 기술 탈취가 사실로 밝혀지면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최근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 지분확보에 나서면서 경영 개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해 대한전선 서울 양재동 사무실과 대한전선 충남 당진공장,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과 관련된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담긴 레이아웃을 부정하게 입수했다는 의혹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지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이 강원 동해에 지은 1~4공장 설계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지난 2022년 대한전선이 충남 당진 1공장을 건설하는 데도 참여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당진 1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술유출을 주도했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연락해 설계를 맡아달라고 설득했고, 계약금도 LS전선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VDC 케이블은 설비 및 공장의 배치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LS전선

은 국내에서만 1조원가량을 투자했으며 향후 10년 이상 먹거리를 책임질 고부가 가치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대한전선이 기존에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해저케이블은 1~2km 수준으로 짧아 50km 이상의 HVDC 케이블을 만드는 LS전선의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라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일한 건축사무소가 경쟁사 공장건설 설계를 수주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LS전선 관계자는 “50km 이상의 해저용 HVDC를 만드는 LS전선을 포함한 총 6개사 공장은 각각 다른 외형을 갖고 있는데 대한전선 공장은 우리 공장과 매우 비슷한 형태”라며 “대한전선이 가운뿐 아니라 다른 설비 업체에도

LS전선 장비와 관련한 기술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 모회사 LS의 지분을 매입했다. 규모는 3%미만이지만 양사의 기술 분쟁속에서 이뤄지고 있어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호반측이 경쟁사 지분을 인수해 법적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경영권 개입을 염두에 둔 행동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LS전선의 모회사인 LS 주가는 장중 24%대까지 치솟았다가 18.96% 상승해 마감했다.

호반측은 산업 전망을 보고 지분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HVDC 케이블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전

략적인 움직임’으로 시장참가자들은 해석한다. 호반이 현재 매입한 지분으로 LS를 압박하긴 힘들지만 구자는 회장의 지분율 3.63% 보다 많은 지분을 매입하게 될 경우 이사회에 관여하면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호반이 LS의 지분 3%를 확보하게 될 경우 ▲주주총회 소집 청구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권 ▲이사·감사해임청구 등의 권리가 생기게 된다. 즉, 호반의 지분 매입은 LS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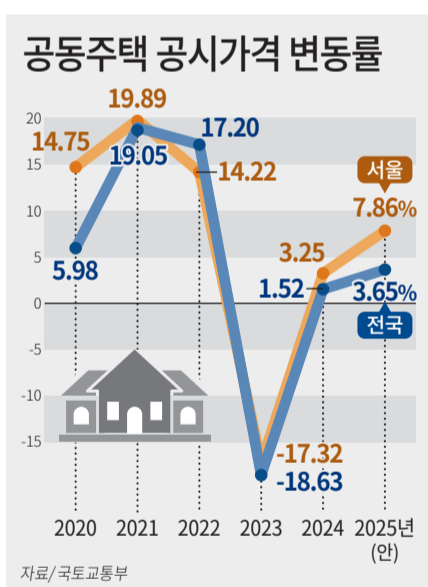
LS 고위 관계자는 “경찰 수사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경쟁사 지분인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곧 발표될 경찰 수사 결과에 앞서 호반측이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16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서 결정된 배상액(4억9623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전선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아파트 공시가 3.65% 올라... 서울 7.86% ↑

국토부, 1558만 가구 공시가 공개 경기 3.16%, 인천 2.51% 등 상승 세종 3.28%, 대구 2.9% 등 하락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올랐다. 서울은 7.86%나 상승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뚜렷했다. 세종과 대구는 각각 3.28%, 2.90% 하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약 1558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4월2일까지 소유자들이 열람하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1.52%)보다는 높지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된 이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다.

지난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한 후 2021년 공시

가는 19.05%, 2022년은 17.20% 올랐다.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면서 2023년에는 18.63% 내리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52% 소폭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시세 변동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서

울 및 수도권 선호지역은 오르고 지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3.28%), 대구(-2.9%),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공시가 상승이 눈에 띄게 높았다. 서초구(11.63%)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마포구(9.34%), 광진구(8.38%), 강동구(7.69%), 양천구(7.37%), 영등포구(7.06%)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 7100만원으로 지난해(1억 6800만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3억 7400만원), 세종(2억 8100만원), 경기(2억 2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안성미 기자 smahn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자영업자 위해 선구매·선결제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 방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추가 대책을 설명하면서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 중심으로 수용비 예산을 통한 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 식당 휴무(주1~2회 이상)와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 관계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도 했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일반 키오스크 대비 약 3배 가격이 높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 민간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면세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용면세점을 3개에서 6개까지 확대한다.

이달 열리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 및 포장서비스 할인 추진에도 나선다.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주당 2만원, 최대 4만원 한도로 당초 발표(15%)보다 환급율을 5%포인트(p) 확대한다.

오는 23일까지 배달의민족 포장서비스 앱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포장 주문시 5000원을 할인해준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은 오는 30일까지 30만장을 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한다. /서예진 기자 syj@

유럽법인·공장건설 등 해외시장 확대 속도

>> 1면 ‘식물줄 모르는 K-라면...’서 계속

라면 수출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이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변화가 K-푸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농식품 수출 기업들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가가 확정되면 미국내 생산기지를 건설하지 않는 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

는 방안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향후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은 인상을 자체 흡수하는 등 업체에 따라 가격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일부 품목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에 걸쳐 논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